

‘초고령 사회’ 전남, 보건의로 가장 취약

지역 낙후 심각·기반시설 등 미비 주원인 17개 군 중 16곳 취약지수 상위 25% 포함 건강증진개발원 ‘ 시도별 취약지역 보고서’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한 전남도가 가장 지역보건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지만 지역 낙후가 심각하고, 보건의로 기반시설·의료는 미비한 것이 그 원인이다. 중앙정부가 지역보건 자원 배분 및 정책적 우선순위 책정에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2015 시·도별 지역보건취약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은 2012년을 기준으로 지역보건취약지수가 56.7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북 54.8점, 경북 54.7점, 경남 54.1점, 강원 53.8점, 충북 53.5점, 충남 52.4점, 세종 52.1점 등 하위권과도 상당한 격차가 났다. 광주는 46.9점으로, 대구 45.2점, 울산 46.0점, 경기·대전 46.2점보다 낮지만, 인천 47.2점, 부산 47.4점보다 높았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재정 여건 등을 평가한 ‘지역낙후성 점수’와 보건의로 수요 대비 보건자원(의료기관, 의료인력)의 접근성, 건강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건의로 취약성 점수’를 측정해 후 이를 종합한 ‘지역보건취약지수’를 개발했다. 지역보건취약지수는 핵심지표값을 표준화 및 가중치를 부여한 T점수(평균 50점, 표준편차 10점)로 환

산한 것으로, 점수(지수)가 높을수록 보건의로 취약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보건취약지수가 상위 25%에 드는 군 단위 지역도 전남에 집중됐다. 전남 17개 군 가운데 1곳을 제외한 16개 군이 포함됐으며, 이어 경북과 경남이 각각 10개, 강원과 충북 각각 6개, 충남 2개 등이었다.

지역유형별로 상위 10위까지 보건취약 지역도 제시됐는데, 대도시의 경우 광주

북구와 남구, 대전 동구, 대구 동구, 부산 영도구·사상구·북구·동구·사하구·강서구 등이 상위에 올랐다. 중소도시 중에는 나주시·여주시, 강원 태백시·삼척시,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정읍시, 경북 영천시, 경남 통영시·밀양시가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농어촌 유형에서는 신안군·완도군·진도군·고흥군·합평군·해남군, 충북 괴산군, 경북 군위군·청송군, 경남 합천군이 지역보건 수준이 취약한 상위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 1만명당 일차진료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이 15.9명으로 분석됐다. 지역유형별로는 대도시가 25.8명, 중소도시 12.8명, 농어촌 10.7명으로 2배 이상 격차가 났다.

표준화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의 경우 전국 평균은 417.5명으로, 대도시는 388.0명, 중소도시는 408.6명, 농어촌은 449.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역보건취약지수를 내기 위해 활용된 지역낙후성 지표는 ▲인구밀도 ▲시가화율(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개별된 면적 비율) ▲도시·벽지 수 ▲하수도 보급률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자립도 등이다. 보건의로 취약성 지표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인구 1만명당 일차진료 의사수 ▲표준화 사망률 등이 사용됐다.

윤현석기자chadol@연남뉴스



광주시의회 정례회 개최
광주시의회(의장 조영표)는 3일 오후 2시 4층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열고 허성만 연구원장 자진사퇴 촉구와 김수삼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4일부터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광주시의회(의장 조영표)는 3일 오후 2시 4층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열고 허성만 연구원장 자진사퇴 촉구와 김수삼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4일부터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광주전남연구원장·세계수영선수권 최대 이슈

광주시의회 오늘부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사업비 쟁점

광주시의회가 4일부터 17일까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행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 문제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임명 등 각종 쟁점이 산적한 가운데 치러지며 시의회와 집행부간 전전(戰戰)이 감사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 피감기관에 대한 행감의 경우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데다, 전국 이슈는 물론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오는 5일부터 치러질 행정자치위원회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추진 문제와 U대회 관련 각종 경기장 사후 활용계획 및 실행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시는 최대 2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때문에 수영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의회와 광주·전남연구원장간 후임 원장 임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로 예정된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행감에서 원장 출석 여부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방서 노후 장비 교체사업 추진문제와 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위수탁 운영문제, 도마위에 오른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투자와 투자심사 등에 대한 내용도 부각될 전망이다.

◇산업건설위원회=오는 11일로 예정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도시철도공사 행감에선 시의 대형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지상고가→저심도)과 사업비(최소 7000억 원 이상) 증가에 따른 건설 추진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 안전진단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또 제2순환도로 재정경감대책 추진에 대한 질의와 김치산업육성 현황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현황,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등에 대한 내용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최근 국정감사에서 광주지역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수가 전국 평균을 세 배 가까이 웃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행감에선 학교시설 추진계획과 급별 법정 정원 현황과 확보율, 교원실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교 신설에 따른 안전문제도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장휘구 교육감의 인사정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급식 정책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 회의실에서 8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상임위원은 의회운영위(1개)·행정자치위(35개)·환경복지위(21개)·산업건설위(18개)·교육위(14개 기관) 등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내년 ‘숲속의 전남’ 사업 622억 투입

장흥 로하스타운 마을숲·섬지역 경관 숲 등 추진

전남도가 민선 6기 브랜드 사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으로 내년 국비와 지방비 6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사업비(462억원)보다 16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으로 장흥 로하스타운 등 마을숲 17개소, 목포 정명여고 등 학교숲 22개소, 가고 싶은 섬과 연계한 섬지역 경관숲 127ha, 장흥 정남진 푸른숲 조성 등 지역특화림 780ha, 목포~광양 간 고속국도와 연계된 국·지방도 나들목 21개소와 국도 77호선 가로경관 확충사업이 추진된다.

또 조선휘조실록과 고지도 등 과거 문헌에 ‘나무 남평 지식강변의 흥수를 막기 위해 조성됐다’고 소개된 십리(十里) 솔밭길 복원사업(50ha)도 이뤄질 전망이다.

소독숲은 최근 식용·약용으로 인기가 있는 황칠특화숲 110ha, 후두 등 권교류

헬빙숲 110ha, 편백, 목백합 등 목재바이오매스 생산숲 2020ha, 참가시나무난대숲 20ha를 조성한다. 참가시나무는 잎과 열매가 신장결석에 효과가 높아 자원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이 전남의 숲을 가꾸고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며, 많은 외지인들이 전남의 숲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나무심기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또 민간 중심의 사단법인 ‘숲속의 전남’이 설립돼 현재 2000명 이상의 회원이 숲문화운동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현재 853만 그루를 심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성과급 나눠먹기 지방공무원 파면까지 중징계

행자부, 시행규칙 제정

성과급을 재배분한 지방공무원에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는다.

또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되면 최고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을 저지른 지방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높아지도록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19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지자체의 숲방향이 징계와 지자체 간 징계 수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보면 성폭력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되고 수수 액수가 그보다 적어도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종행기자 golee@

지방 평가

조오섭 “박대통령 광주 공약 예산반영 5.7% 불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광주시 공약사업 중 실제 예산이 반영된 비율은 5.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조오섭(북구 2) 의원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주에 7대부문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자동차 도도시 구축 등 총사업비는 4조7299억원이지만 올해까지 반영된 사업예산은 2706억 원(5.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광주지역 세부공약사업은 모두 14개인데, 이중 올해까지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6개로 사업비만도 3조4768억원(73%)에 달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후보 시절 약속한 지역공약 사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는 공약사업이 타 시·도에 비해 잘 이행되는지 여부를 파악, 차별을 받고 있다면 당장 시정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박 대통령과 정부에 지역공약사업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행기자 golee@

레이저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펄토세컨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무출혈 / 무통증 / 무봉합 / 무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노안방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난임극복을 위한 시엘병원 강좌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시엘병원 별관 회의실
연자 최범채 원장

나이는 난임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임력은 더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미만이고 1년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을 경우 또는 35세 이상이고 6개월 또는 그 이상 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난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7(광천동)
문의전화 : (062)606-1710